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0월 4일, 주호영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1. 2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 11. 11.)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3. 11.)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주호영의원)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환경·경관의 보호, 수원(水源)의 함양과 수질관리, 재해의 방지
또는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 등을 위하여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산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유림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산림 소유자는 임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또는 가축의 방목이 금지되고 토지의 형상 변경도 할 수 없는 등 해당 산림에서 경영 활동이 제한을 받게 되므로, 산림의 공익가치 창출에 기여한 산주에게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업용 산지는 임업생산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소득보전을 위한 임업직불금이 지급되지만 공익을 위해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은 임업생산도 할 수 없고 임업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산정 시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양(水源涵養)·대기정화·토사유출방지·온실가스 흡수 등의 공익적 가치평가액을 반영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징수하는데 산주에게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아 불공정하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한편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 공해(公害) 방지와 경관 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숲 조성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음.

이에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증진을 위하여 공익규제를 받고 있는

산주 등을 대상으로 한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함으로써, 산림보호구역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녹색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없음(소위원회 직접 회부)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